

민주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추진 불발

檢 돈봉투 수사 등 대립 상황 고려 의총서 찬반 토론 끝 보류 결정 21일 ‘꼼수 탈당 방지책’ 발표...공천 룰로 전선 확장시 내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의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진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당내 공감대는 마련되지 않았다.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이 표류함에 따라 당내 혁신 동력 약화는 물론 공천 룰로 전선이 확대될 경우, 당내 내홍이 촉발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나아가야 할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이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은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혁신위 쇄신안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영장 청구 등을 고려, 확실히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같은 달 26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비껴갔다. 이후 해당 안건의 의총이 열렸지만 20일이나 걸렸음에도 이날 추진이 다시 불발된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하며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당에서 의원들에 대

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박광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원내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호 쇄신안이 표류하면서 혁신 동력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치적 허한기에 접어드는데,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혁신위가 활동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의 이슈가 정국을 뒤 흔들면서 혁신

위가 이슈를 가져갈 정치적 공간도 녹취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혁신위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년 총선 공천 룰로 혁신 전선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내홍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비명(비이재명) 진영 일각에서는 당내 주류 세력이 혁신위와 물 밑 공감대를 형성, 혁신을 명분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은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하고, 또 현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다”며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는 것은 일반통행의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결집이며 혁신위는 이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공감대 높은 혁신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남뉴스

여의도 브리핑

“국힘, 실업급여 수급자 비하 발언 사과하라”

이병훈, 민주 정책조정회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가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며 “여자들, 젊



은 청년들이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사넬 선글라스 사고 즐기고 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난 발언”이라며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국토부장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의 위기 상황”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의혹을 두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쌀값 정상화 ‘양곡관리법’ 재추진

尹 대통령 지난해 거부권...신정훈 의원, 수급 관리 등 담야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고, 최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법안 재추진에 나서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3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으로서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

로막했다.

민주당은 이후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담정 간담회를 열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현재, 여전히 18만3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재추진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적의 재정립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 시기

조정과 수확기·시장격리시발방용,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 가격보장제 도입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 관리 및 자급목표와 연계한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함께 발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생산자 직불제도 심의위에 의결 기능을 포함시켜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산 주인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 지급

서삼석,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남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3일 산 주인에게 국가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산림보존지불제의 도입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입업직불제는 입업용산지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산림보호구역은 수원협양, 재해예방,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됐지만, 산림경영이 제한돼 소득창출이 어려워 불이익이 큰



실정이다. 산림보유구역을 소유한 산주는 입업직불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개인 재산권 피해를 입는 등 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산물 및 산사태 등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한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06월 0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6월 12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주식회사 가든플라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1(동명동) 청산인 민병구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6월 9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주식회사 패터슨
광주광역시 북구 안방울대로 1042번길 49, 105호(신용동) 청산인 진경미

상속확정등인공고
· 피상속인: 망 주오노(711224-XXXXXX)
· 최후주소: 전남 장성군 북이면 연수길 36-3
· 피상속인 망 주오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확정등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3627호로 신청하여 2023년 7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7월 14일
· 상속인: 주정현(940713-XXXXXX)
광주 서구 원변화대로584번길 10, 104호(광천동, 동성연립)
· 신고기간: 2023. 7. 14. ~ 2023. 9. 23.
· 채권신고처: 상속인 주정현의 주소

산행안내
7월15일(토)
▲광주호산회 (제655차 정기산행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 힐링 트레킹) 오전 03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시 40분 진월동 육교 밑 03시 45분 백운우체국 03시 50분 롯데백화점 04시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공고
광주가정법원 2023년33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이갑재(1940.6.9생) 등목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의 22 최후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22 사 망 일: 2023년 3월 19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3년 9월 15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3년 7월 14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공고
광주가정법원 2023년336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이철호(1966.1.1생) 등목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의 22 최후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22 사 망 일: 2023년 3월 19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3년 9월 15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3년 7월 14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사찰(금) 안내
· 위 치: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약 1,700평
· 가 액: 9억
- 약사여래불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상각 1동
- 108 돌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중가는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

금당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중고주택 전문매수매도 (골프해수욕장인근)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계곡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점 땅 4,650㎡ (1,406평)
-공시가 7,527만원, 투지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정동리 (776평)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령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先州日報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재단
이날
광주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